

# KMI 동향분석

---

**VOL.89**  
2018 JUNE

발간년월 2018년 6월(통권 제89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http://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최지현 독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21cjoshua@kmi.re.kr/051-797-4793)

2018년 3월 6일 동티모르와 호주 두 나라는 해양 경계를 최종 확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유엔해양법협약상 조정 절차를 통해서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그 조정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사건은 2016년 6월 동티모르가 호주를 상대로 해양 경계확정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상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 2016년 9월 19일 조정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호주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후, 두 나라는 조정 절차를 통하여 해양 경계확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해양 경계확정 및 그레이트 선라이즈(Greater Sunrise) 유전의 공동 이용을 위한 특별 체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최종 조약을 체결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상 조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정위원회는 양국 사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두 국가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율하면서 해양 경계확정 조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 사건은 해안선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이고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이 한 국가(호주, 한국)로부터 유래하여 다른 국가(동티모르, 일본) 바로 앞까지 뻗쳐져 있다는 점, 그리고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이 그 연장 대륙붕 위에 놓여져 있다는 점 때문에 한일 사례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결론만을 보면 동티모르와 호주가 중간선을 기준으로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의 경계를 획정한 사례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검토해보면 조정위원회가 경계 확정선의 '위치'보다는 '자원의 공동 이용 체제'를 수립하는 것에 더 많은 조정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정 사건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에 시사점을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

---

즉,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 문제의 핵심은 경계확정이 아니라 해저 자원 개발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현재 대륙붕 공동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소극적 태도가 양국 간 해양 분쟁 해결의 본질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분쟁 당사국간 평화로운 자원 공동 이용만이 사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일본이 인식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역시 이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

##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조정위원회, 동티모르와 호주 간의 해양 경계확정에 관한 조정 보고서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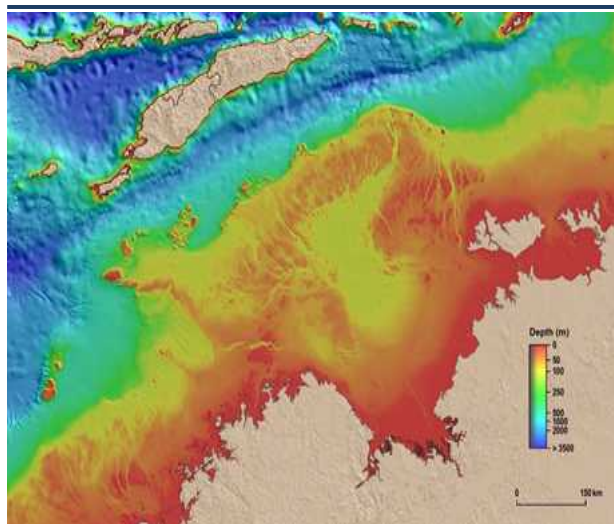
### ■ 호주와 동티모르가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조정 절차를 통해서 해양 경계확정 조약을 체결

- 2016년 6월 동티모르는 호주를 상대로 해양 경계확정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상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두 국가는 2018년 3월 6일 조약을 체결하고 해양 경계를 최종 확정함
- 이로써 호주와 동티모르는 2002년 동티모르 독립 시부터 시작된 양국 간의 공동개발 체제를 종식시켰으며, 2018년 5월 9일 조정절차를 담은 조정 보고서는 그 절차를 진행한 상설중재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었음

### ■ 지리적 유성 문제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일본 사이 공동개발 협정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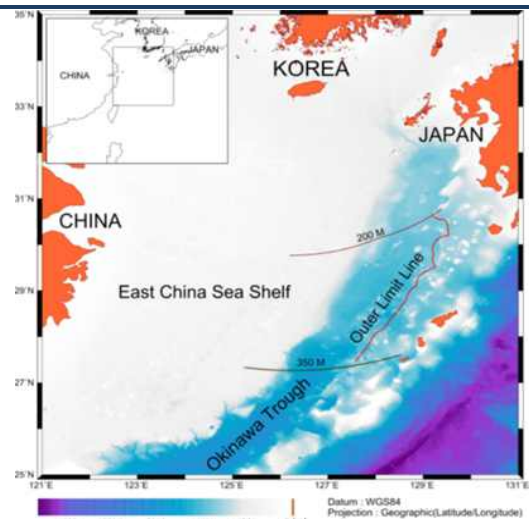
-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이 호주에서 유래한다는 점 때문에 동티모르-호주 공동개발 구역은 중간선을 기준으로 동티모르 쪽에 놓여져 있었으며, 이 점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과 유사한 부분임
- 동티모르-호주 이번 해양 경계확정 조약이 우리나라에 주게 될 합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방안을 정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동티모르-호주 공동개발구역의 해양지형도



자료 : PCA 동티모르-호주 강제조정 중 동티모르 제출 문서

그림 2.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 해양지형도



자료 : 2013년 CLCS 제출 한국 문서

## 동티모르는 호주와 공동개발을 종료하고 이번 조정 절차를 통하여 경계확정이라는 최종 목적 달성

### ■ 동티모르와 호주는 동티모르 독립 직후부터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하고 이 해역에서 공동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동티모르는 계속적으로 불만을 표출

- 독립 이후 동티모르는 호주와 2002년 동티모르-호주 티모르해 조약(Timor Sea Treaty)을 체결하였음(2003년 발효)
- \* 1989년 호주가 당시 동티모르 점령군이었던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티모르 갭 조약 상 공동개발 체제는 동티모르 독립 이후 동티모르 호주 공동개발 체제로 대체되었음. 두 공동개발구역은 그 범위가 일치함
- 이익 배분은 9(동티모르):1(호주)로 합의되었으며, 이는 티모르 갭 조약의 1(인도네시아):1(호주) 배분과 비교하여 동티모르에 유리한 것이었음
- 동티모르와 호주는 2003년 선라이즈 공동광구 협정, 2007년 티모르해 특정해양조정 조약(Certain Maritime Arrangement in the Timor Sea, CMATS)을 체결하고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 지대의 개발 및 이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하였음
- 하지만 동티모르는 동티모르해 공동개발 구역 수립 및 광구 개발과 관련한 일련의 조약 내용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계속적으로 국제 소송을 통하여 이를 무효화시키데 노력을 기울임

### ■ 동티모르는 2013년부터 티모르해 특정해양조정 조약(CMATS)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수 차례 국제법정에 소를 제기

- 동티모르는 2013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된 것을 계기로 공동개발 구역 설정과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의 이익 배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특정해양조정 조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
- 2013년 결국 동티모르는 호주를 상대로 특정해양조정조약(CMATS)이 무효라는 이유로 중재재판을 제기하여,<sup>1)</sup> CMATS를 통하여 형성된 공동개발 체제를 지속시키기 보다는 최종적인 경계확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임
- 연이어 동티모르는 ‘티모르 해 조약’에 따라서 파이프 라인에 대한 관할권 문제에 불만을 가지고 또 다른 중재재판을 2015년 제기함<sup>2)</sup>

1) Arbitration under the Timor Sea Treaty (Timor-Leste v. Australia), PCA Case No. 2013-16.

2) Arbitration under the Timor Sea Treaty (Timor-Leste v. Australia), PCA Case No. 2015-42.

- 이외에도 동티모르는 중재재판 절차 과정에서 호주가 첩보 요원을 통한 소송 관련 문서 탈취 행위를 하자 이에 대해서 그 반환을 요구하며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음

## ■ 2016년 4월 11일, 동티모르는 호주를 상대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강제 조정(conciliation) 절차를 개시한다고 공표하고 조정 신청

- 동티모르는 호주를 상대로 해양 경계획정을 그 대상으로 하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조정을 신청하였음
  - \* 유엔해양법협약 상 제298조의 선택적 예외를 선언한 국가(호주, 2002. 3. 22.)를 상대로는 해양 경계획정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조정을 신청할 수는 있음
- 공동개발 체제를 지속시키기 원했던 호주는 조정 절차 초반 조정위원회에 그 권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조정위원회는 이를 배척하고 2016년 9월 19일 조정 권한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림
- 호주는 이후 조정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통하여 동티모르와 전격적으로 통합적 일괄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최종적인 경계획정 회담에 들어가기로 합의함

## ■ 2018년 3월 6일 동티모르와 호주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에 따라 진행된 조정절차 결과 합의된 동티모르-호주 경계획정 조약에 서명하였고, 5월 8일 조정 절차 및 대상에 대해서 기록한 보고서 공개

- 조정 절차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양국의 합의 도달을 알리는 언론보도 자료 및 조약 문안을 배포하였고, 양국은 2018년 3월 6일 뉴욕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 경계획정 조약에 서명하였음
- 동티모르와 호주 간 해양 경계획정 조약은 해양 경계선 이외에도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의 법적 지위, 그레이터 선라이즈 개발을 위한 특별 체제의 수립, 자원개발과 이익 공유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5월 8일 보고된 이번 조정 보고서에는 해양 경계획정 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조정위원회에 어떠한 조정절차를 거쳤으며, 어떠한 문제를 대상으로 두 국가 사이 합의를 이끌어 냈는지를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자원 공유 체제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양 경계확정을 완료할 수 있었던 동티모르 호주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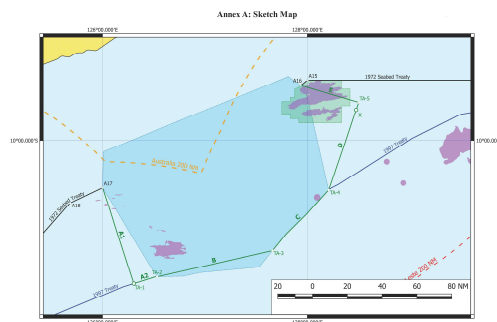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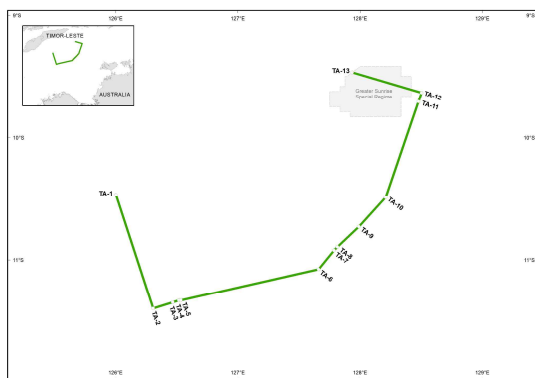
### ■ 호주와 동티모르를 2018년 3월 체결된 해양 경계확정 조약을 통해서 상호간에 중간선을 기준으로 대륙붕 및 EEZ를 배분하는 단일 경계선(일부 제외)을 확정

- 최종적으로 합의한 해양 경계확정 조약에 따르면 호주와 동티모르는 이전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의 호주 측 남쪽 부분을 해양 경계확정선으로 확정하였음
- 이로써 두 국가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양 경계를 확정하게 되었으며, 동티모르-호주 공동개발 구역은 모두 동티모르의 대륙붕으로 결정됨

\* 그림 3 두 번째 그림 진한 파랑 부분이 이번에 종료한 동티모르-호주 공동개발구역

- 동쪽에 있는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에 대해서는 조약에서 특별 체제(special regime)를 통하여 호주와 동티모르가 자원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 관리하도록 하였음

그림 3. 최종 해양 경계확정 선 및 이전 공동개발 구역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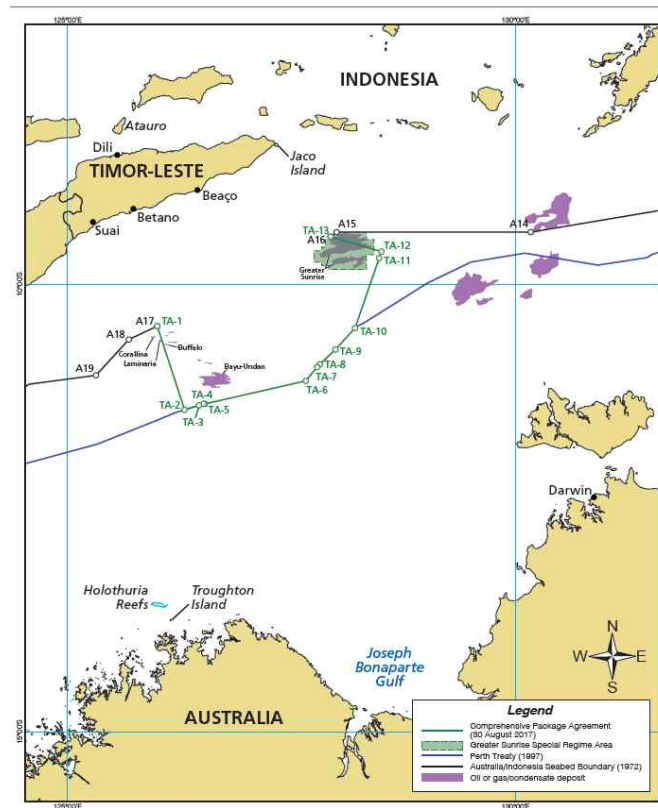


자료 : 동티모르-호주 해양 경계확정 조약 Annex B

자료 : 2017년 8월 동티모르-호주 합의



그림 4. 주요 해저 광구의 위치



자료 : PCA 동티모르-호주 강제조정 보고서

## ■ 400해리 미만 해역에서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을 해양 경계획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사례로 기록될 이번 동티모르-호주 해양 경계획정 조약

- 400해리 미만 해역에서 자연적 연장을 해양 경계획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선례는 아님
- 현재 제주도 남방 수역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체결(1974) 및 발효(1978) 당시에는 대륙붕 자연적 연장 논리에 힘입어 공동개발 구역을 가상 중간선을 기준으로 일본에 많이 치우치게 설정할 수 있었음
- 이번 사건이 400해리 미만 해역에서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기본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임

## ■ ‘해양 경계획정’ 보다 ‘해저 자원의 공유 및 이익 배분’에 조정의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중간선 경계획정이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 과정의 핵심 논점이라고 볼 수 없음

- 동티모르-호주 사례가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는 것은 한 국가(한국, 호주)의 육지영토로부터만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이 기원한다는 점과 해당 수역이 400해리 미만 해역이라는 점 때문임
- 그러나 이외에 다른 점이 상당 부분 존재함. 일단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한-일의 경우 해당 수역에 공동개발 체제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며,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종료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임
- 또한 동티모르-호주 사례의 경우 핵심 지역인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 지대에 대해서 경계획정 이후에도 양국 간의 특별 체제를 마련하여 공동으로 자원을 개발하도록 합의하였기 때문에 경계 획정 과정에서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을 고려해야 할 당위성이 많이 약화된 측면도 존재함
- 특히 이번 조정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해보면 조정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조정한 사안은 경계획정 문제가 아니라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의 공동개발을 위한 특별 체제 수립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단순히 중간선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될 것이며 자원에 대한 공유 체제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 경계획정도 가능했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
- \* 공동개발을 통해 생산된 석유 및 가스 파이프 라인이 모두 호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이번 조약 체결 과정에서 두 국가 사이 이익 배분 및 경계획정 선을 정하는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제주 남방 해역에서 자원 개발 문제가 한-일 양국 사이의 계속적인 핵심 사안이 될 수 있도록 의제화 필요

###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종료가 10여년 정도 남아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최대한 자원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이번 동티모르-호주 사례에서는 경계획정선의 위치보다도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상호간에 어떠한 협력 체제를 가져갈 것인지 여부가 조정 과정의 주요 논의 사안이었음
- 현 시점에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최대한 이 해역에서 경제적 이익의 존재를 현실화 시키는 것이 필요함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2028년 협정 종료 전까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 자원 개발에 관한 상호 이해 및 공동 노력이 선행되어야 제주도 남방 해역에 대한 평화로운 공존 체제가 가능하다는 상호 이해 필요

- 동티모르 호주 조정 과정에서도 자원 개발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상호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점을 마련했기 때문에 최종 경계획정이 가능해짐
- 한-일간에도 이 해역에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상호 이해가 전제되어야 자원 이외 다른 부분에서의 해역 관리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설득 필요
- 동티모르 호주의 경우 이 해역에서 자원 개발 문제, 공동개발 체제 유지 여부 등이 양국의 외교 관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었음
- 동북아시아 정치 지형이 평화와 화해의 기조로 변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해저 자원 개발 문제가 동아시아 상호 공존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의 대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젠다를 사전에 미리 선점하는 노력 등 창의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임

##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듦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 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 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제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URL: <http://www.kmi.re.kr/>